

경기연구 “임진강, 남북 공동관리 필요”

北 황강댐 방류땀 피해 불가피
道 위원회 설립 선제대응 주장
李지사 ‘수계기구 제안’ 힘써

경기연구원이 임진강 수계를 남북이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기연구원은 ‘기후 위기 시대, 남북이 함께 하는 임진강’ 보고서를 발간해 임진강 공동 관리를 위해선 북한이 남북 협력에 나설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가 선제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고 남북 협력을 위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북한 황강댐의 저수 용량이 3억5천t인데 반해 우리 측 군남댐의 저수 용량이 7천만t에 불과해,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우리 측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임진강 유역 강수량이 늘면 황강댐

방류에 의한 우리 측 수해 또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황강댐 건설 이후 우리 측 유량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 파주 지역에서 매년 봄마다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는데 상류 댐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에 제기된 주장이다. 지역 주민들은 임진강의 어획량도 감소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DMZ포럼 기초연설에서 임진강 수계의 공동 관리를 위한 남북 수계관리 기구 설치를 북측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경기도 차원의 임진강 관리 위원회 설립과 남북 협력을 위한 협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영무 연구위원은 “도가 선제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각 시·군,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 확립 및 협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기정기자 kanggi@kyeongin.com

[영상]이재강 경기 평화부지사 "개성공단 재개 선언까지 1인 시위"

"유엔사 내정간섭...월경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
"개성공단, 재개 선언부터--DMZ 그림 감용으로 업무 지속"

[CBS노컷뉴스 번역·고우성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로 남단에서 유엔군사령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자문사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임시 집무실에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지지반응을 많이 해주었다"며 "극력에 힘입어 개성공단 재개되는 그날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엔사 내정간섭...월경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

경기도는 지난 9일 남북 북 안축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유엔사 승인이 필요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아마도 정전협정에 대한 유엔사의 서적 해석이나 이때까지 있었던 관행에 의해 이뤄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이 부지사는 평화누리공원에 전야 집무실을 설치하고 통일대로 남단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지사는 "처음에는 우리 군 1보병사단으로부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유엔사 승인이 필요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아마도 정전협정에 대한 유엔사의 서적 해석이나 이때까지 있었던 관행에 의해 이뤄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찍이 정전협정에 의하면 유엔사 승인은 군사적 성질에 국한된다"며 "평화부지사의 집무실 이전은 행정행위로 군사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선조기와 유엔사 깃발. (사진=연합뉴스/자문사진)
유엔사는 지난 2018년 철도 시범 운행 및 점검을 위한 우리 정부의 방북 시도와 지난해 보간 협력을 위한 타임아웃 약속도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이 부지사는 이에 대해 "이런 일찍이 내정간섭으로 지금도 매일 우리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편파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에 유엔사 때문에 방해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자 월경행위이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부터--DMZ 그림 감용으로 업무 지속"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을 단장 재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한 개성공단 재개 선언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 9·17 공동선언이나 9·19평양공동선언에서도 개성공단 문제는 서로 합의해 당장 열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제재와는 전혀 관계없는 미국의 승인이나 대북제재의 틀 속에 관해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면서 "국제적인 협력의 이념이 대가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길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남과 북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4년 12월 문을 연 이후 2016년 12월 문을 닫기까지 누적생산액이 32억 달러(3조 8천억 원)에 달했다.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해서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창"이었다며 "남북한 5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매일 만나서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곳이었다는 평가를 하면서 평화도 확보했다"고 아쉬워했다.



(사진=경기도 평화부지사실 제공)
그는 감동받았던 일화에 대해 "한 시민단체에서 사람과 나무, 새, 동물, 배, 달이 그려진 DMZ 그림을 가지고 왔다"며 "DMZ가 63년 동안 사람은 안 다니고 새와 동물들, 나무와 금강یان 구간 곳이었구나, 이제는 DMZ에서 남과 북이 사람으로 서로 만나서 평화의 터전을 일구는 곳이 돼야 되겠다"는 평가를 가졌을 때 가장 감동했다. DMZ 평화가 곧 한반도 평화기 때문에 어떤 그 몽골하게 받은 감동을 그대로 가져가서 계속 이 업무를 지속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부지사를 지지하기 위해 방문한 표준어선명회공경총서위원장 박석문 집행위원장장은 "유엔사가 비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재개를 가하는 것은 월경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지사가 정말 대응하신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라며 "부지사의 선도적인 실천이 전 국민적으로 반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지금까지 유엔사의 부당한 월경에 대해 이 부지사처럼 갖는 문제의식을 갖고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촉구한 정치인은 없었다"면서 "청와대나 정치권에서도 유엔사 월경 문제나 남북 교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미국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 입주 주창시기 일제가 '통일남매'를 찾 출하한 2004년 12월 15일을 기념해 다음 달 15일 임진각에서 통일대로를 넘어 도라산방대까지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한 3호 1마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법률인' 집행위원장 이창희 외국어대 명예교수, 평화통일 국민회 상임대표 권혁의 김원중 회장, 6·15경북본부 이종철 상임대표, 6·15 서울본부 권영석 공동집행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종길 상임의장, 개성공단지구지위재단 김진환 이사장, 민주평통 창명관 경기부위원장 등이 방문했다.

서해5도와 평화수역으로서의 브랜드화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北의 연평도 도발 이후 특별법 마련
10년간 절반 예산도 집행 못한 이유는
주민 절박 현안 외면·의견 청취 불신
안보 우선·중앙·공무원 '갓대' 원인
정부·인천시 법·제도 변화 지원 절실

서해 5도. 남북간 긴장과 평화의 상징이다. 지난 24일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다. 아담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10주기'에 대통령이 참석했다면서 비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해 5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정치권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서해 5도 자원특별법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국비 투자 규모도 4천599억원에서 5천557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책정된 사업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78개 사업에 9천109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43개 사업에 3천794억원을 집행했다. 예산을 정해 놓고도 10년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서해5도를 방문한 사람이 접하는 것은 섬에 설치된 대형화된 안보시설들이다. 포격사태의 경험을 토대로 대피시설들도 갖추어져 있다. 서해5도 자원특별법 내용의 대부분은 2011년 국토연구원 등이 수행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잠재된 여건 차이 등을 법령이나 주민 사업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안보 우선과 중앙정부 그리고 공무원의 시각이 더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정부가 지원계획을 연장하면서 비전과 추진 방향을 새롭게 내세웠다. 약속대로 2025년에는 과연 '풍요로운 평화의 고

장, 서해5도'가 되어 있을까.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우선 반영될 것인가. 실현 가능한 사업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섬에 필요한 절박한 현안들을 여러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서해5도의 어장 확장을 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정착 현지 어민들은 물고기가 있는 어장과 야간 조업 확대를 원했다. 불법 어로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요구하였다. 어선과 그물 등 청소를 위해 다량으로 사용되는 라스가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했다. 어구 실명제와 불법 어구 방치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섬의 생활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어민들 대부분이 고령화로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인력 지원방안도 섬의 화두였다. 섬에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관광도 새로운 과제다. 물가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택배 및 물류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국의 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항만부두 확대 및 공동이용, 백령도 공항문제도 단골 주제다. 일부 어민들이 주장하는 중국 어선의 배후 지원 세력이 한국인이라는 주장에도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들을 보면서 생각한다. 어떻게 예산이 남았을까. 그것은 공무원과 정부의 잣대로는 집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거나 법령에 자원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형식적인 간담회나 의견 청취를 불신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서해5도 주민들은 군인들의 근무 기간보다 더 오래도록 경제의 바다와 국토를 지키고 있다. 서해5도를 향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인천시 남북교류 협력과는 과장 1명에 12명의 직원이 있다. 경기도는 평화부지사를 중심으로 72명, 강원도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 64명이 포진하고 있다. 금강산과 DMZ, 원산과 백두산을 연계하는 '고성 UN평화특별도시'도 제안되어 있다. DMZ나 한강하구사업도 한참 앞서 있다. 서해5도에 대한 직제도 평화정책도 인천시는 뒤떨어져 있다.

법과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다음 달에는 김교흥,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국회의원, 인천시,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인하대 로스쿨 등이 가칭 '서해5도 평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률안은 '서해5도 자원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해5도 수역의 평화정착, 남북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주민들의 권익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법학자, 역사학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언론사 등이 함께 서해5도를 새롭게 집중조명하는 별도의 사업도 준비 중이다.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서해5도의 희망은 더 커질 것이다. 평화의 바다로서 서해5도를 브랜드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기대한다.